

---

# 2009. 부분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 인천교통공사 >

---

인 천 광 역 시  
(감 사 관 실)

## I

## 監 査 概 要

- ❖ 감사기관 : 인천교통공사
- ❖ 감사기간 : 2009. 12.14.~12.16. 12.21.~12.22. (5일간)
- ❖ 감사범위 : 2007. 10월부터 감사일까지
- ❖ 감 사 반 : 회계감사담당외 6명(시민감사관 1명 참여)
- ❖ 중점감사사항
  - 예산편성 및 회계 집행의 적정성
  - 교통관련(매표 등) 전산시스템 및 주차타워 등 건축물 증설 현황
  - 임대사업 적정 운영여부      ○ 세입 및 자금관리의 효율적 관리

[일련번호 : ]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제 목] 예산전용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

[현 황]

○ 예산전용현황

(단위 : 천원)

기 간	전용액	집행액	잔액	비고
'07. 11월 ~ '07.12월	22,475	13,955	8,520	
'08년 1월 ~ '08. 12월	59,353	46,171	13,182	
'09.1월 ~ '09. 11월	59,675	52,762	6,913	

### [위법부당내용]

○ 회계규정 제11조는 사장은 예산집행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 총칙에 정하는 과목을 제외하고는 세출예산의 각 세항, 각 목간 비용을 전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교통연수원 재무회계 시행내규 제6조는 교통연수원장은 관·항간 전용은 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동일 항내 목간은 원장이 전용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교통연수원에서는 2007년 12월 1일부터 24일까지 총 5회에 걸쳐 급량비 예산이 없음에도 432천원을 급량비 명목으로 신용카드로 결제를 한 후, 2007년 12월 28일 급량비, 국민연금 등 부족분에 대하여 5,000천원을 항간 전용하면서 관련규정에 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자체적으로 전용요구서에 결재를 득하여 전용 한 것처럼 하여 2008. 1. 23 부적정하게 전용·집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일련번호 : ]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제 목] 복리후생적 경비 부적절 예산편성 및 집행

[위법부당내용]

### 1) 복리후생적 경비 부적절 편성 및 집행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따르면 임금(제수당 포함) 및 복리후생적 경비는 각 법인별 자체보수규정 등 관련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편성·지급하고, 원칙적으로 법령 및 자체규정에 지급대상·지급액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인건비성 경비는 예산에 편성·지급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인천교통공사에서는 공사 「복리후생규정」 제7조 별표 1에 급식보조비, 가계안정비, 월동보조비 등의 복리후생비 지급대상을 명시하고 있으나 이 중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월동보조비’는 그 지급액을 명시하지 않고 예산을 임의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직원과 달리 임원의 경우에는 기본연봉에 급여성 복리후생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급여성 복리후생비를 지급하지 않아야 함에도 임원에게 ‘선택적 복지제도’를 부적절하게 편성·지급하고 있고, 그 밖의 위 현황의 각 과목들은 예산편성기준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음에도 공사 「복리후생규정」 제8조(기타 후생비)<sup>1)</sup>의 규정을 들어 임의로 예산을 편성·지급하고 있음.

### 2)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관한 사항

①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의 재산형성과 생활안정의 지원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사업이익의 일부를 출연하여 설치한 기금으로, 인천교통공사에서는 공사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1997년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및 공사 「사내근

1) 제8조(기타 후생비) 공사는 임·직원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기타 후생비의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로복지기금 정관」 제4조 별첨 1과 제31조, 제31조의1 등의 규정에 따르면,

1. 근로자 경조비의 지출, 2. 근로자주택 구입자금의 보조
3. 우리사주 구입자금의 보조, 4.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 보조
5. 장학금·재난구호금의 지급, 6. 체육·문화활동의 지원,
7. 근로자의 날 행사지원, 8. 기금운영을 위한 경비 지출
9. 근로복지시설에 대한 출자·출연, 10. 선택적복지제도 시행

11. 기타 요양금, 체육문화 행사 지원비, 재난구호비, 자녀출산 보조금, 생일축화금, 효도지원금, 명절지원금, 자녀입학보조금, 콘도이용 등의 사업을 행하도록 되어 있음.

그런데도 공사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우선 사용하여야 하는 근로자에 대한 각종 복지사업을 기금에서 사용하지 않고 예산으로 편성하여 지원함으로써 기금은 그대로 유지되고, 근로자에게는 예산으로 혜택을 줌으로서 사실상 중복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② 선택적복지제도와 관련하여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에는 기금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근로자가 정하여진 금액의 한도 내에서 필요한 항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이하 "선택적 근로자복지제도"라 한다)로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이에 공사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임원을 제외한 직원을 대상으로 선택적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내용을 보면 기본항목에 보장보험을, 자율항목에 건강관리, 자기계발, 취미, 문화생활, 가족친화(생일축하 등)의 항목을 정하여 공통점수(125점~500점), 근속점수(20점~400점), 가족점수(50점~100점)<sup>2)</sup> 등의 복지점수를 직원별로 배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최소한 위 현황 중 법 제14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들인 직원능력개발비는 선택적복지제도내에서 시행하고 있는 과목들로 별도의 예산이나 기금에서 지출하지 않아야 함에도 사실상 이중으로 지급하고 있는 실정임.

---

2) 1점 = 1,000원

[일련번호 : ]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제 목] 계약 지연배상금 관련 업무추진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지연배상금을 내도록 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교통공사에서는 '08. 10. 30 "00주차장 주차전용 건축물 건립 운영 타당성 검토 00"을 종합건축사사무소 000과 체결하였고, 그 계약기간은 '08.10.30부터 '09.2.26일까지입니다. 교통공사에서는 '09. 2. 27일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된 준공계를 접수하고 '09. 3. 12 준공검사를 완료하였으므로 지체일수에 해당하는 14일에 대한 지연배상금 2,300천원을 부과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습니다.

[일련번호 : ]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제 목] 공사 기성금 지급 업무 등 추진 부적정

[현 황]

[위법부당내용]

### 가. 하도급업체 기성금 지급여부 미확인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에 의하면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에 대하여 준공금을 받은 때에는 하도급대금을, 기성금을 받은 때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받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회계예규 2200.04-104-16, '07.3.5) 제39조에 의하면 계약상대자는 적어도 30일마다 제27조제8항에 의한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금청구서(기수령한 기성대가가 있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대가를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를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청구서의 기재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교통공사에서는 “인천월미관광특구 0000 설치공사”에 대한 기성금을 총 5회에 걸쳐 지급함에 있어 매회 기성금 청구시마다 전회 기성금에 대하여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였음을 증빙서로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습니다.

### 나. 하도급업체 대금 지급방법 부적정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13조제3항내지 제4항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경우로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완료에 따라 준공금 등을 받은 때에는 하도급대금을,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진척에 따라 기성금

등을 받은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한 분에 상당한 금액을 그 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당해 제조 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인천교통공사로부터 현금으로 받았으므로 수급사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어야 하나 어음으로 집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 **다. 하도급거래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미이행**

○ 법 제22조는 누구든지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2009년 11월 6일 하도급거래에 대하여 자체 조사한 결과, 어음으로 지급한 공사대금에 대하여 조속히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함을 원사업자에게 통보하면서 하도급법에 의한 신고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습니다.

위와 같이 교통공사에서는 “월미관광특구 0000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원도급자 2인에게 총 5차례에 걸쳐 기성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나, 기성금 지급시 마다 하도급대금 지급여부를 소홀히 하여 현금지급이 아닌 어음으로 지급되고 있고, 이 사실을 확인하고도 이에 대한 관련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습니다.



[일련번호 : ]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제 목] 00타워 등 건축물 증축공사 설계도서 검토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인천교통공사에서는 00구 00동 00번지상의 ‘인천교통공사 00타워등 건축물증축공사’에 대하여 000건설과 2009. 7. 1. 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주차타워 터파기공사 중에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 및 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서류에 따라 감독하거나 소속공무원 등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하게 하여야 하며,

설계용역감독관은 설계도서 작성 시 설계도서 검토를 철저히 하여 과다하게 작성되지 않도록 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감독관(공사감리자)은 공사시방서, 설계도서, 현장설명서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설계서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 공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변경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라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인천교통공사에서는 바닥마감인 폴리우레아 시공을 위한 콘크리트면 마무리를 도면에는 기계마감으로 하고 내역에는 쇠풀손 마감으로 하는 것으로 하여 과다하게 설계되어 있었고, 기존 건물의 구조보강을 위한 철근콘크리트 공사의 내역에 있어서는 본 공사와 동일한 공종임에도 동일한 단가를 적용하지 않고 견적을 받아 과다하게 계상되어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 조치 없이 공사를 발주하였고, 과다계상으로 인한 36,351천원 상당에 대하여 감사일 현재까지 설계변경 감액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일련번호 : ]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제 목] 화장실 리모델링공사 추진에 관한 사항

[위법부당 내용]

1. 공사감독 부적정

《화장실 타일 시공 현황》

(단위:천 원)

공사명	공종	과다수량	과다금액	비고
터미널동 화장실 리모델링공사	대형타일 (폴리싱)	316㎡	6,471	폴리싱 타일을 일반 타일로 시공
버스동 화장실 리모델링공사	대형타일 (폴리싱)	369㎡	9,025	폴리싱 타일을 일반 타일로 시공
계			15,496	

인천교통공사에서는 장기간 사용으로 노후한 화장실을 개선하여 고객들에게 청결한 화장실을 제공코자 버스동(‘09. 5. 19 ~ 6. 30), 터미널동(‘09. 6. 1 ~ 7. 14), 대합실 내(‘07.10.15 ~ 11. 12)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 및 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서류에 따라 감독하거나 소속공무원 등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하게 하여야 하며,

공사감독관은 설계도서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설계서의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설계도서대로 공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공사감독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변경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라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인천교통공사에서는 ‘터미널동화장실 리모델링공사’ 및 ‘버스동화장실 리모델링공사’를 추진하면서 화장실 벽타일을 일반 타일 보다 흡수율이 낮고 강도

가 큰 폴리싱 타일로 설계를 하여 발주하였으나 실제 시공은 폴리싱 타일이 아닌 일반 도기질타일로 시공되어 있음에도 이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준공 처리한 결과 15,496천원의 예산을 과다 지출한 사실이 있습니다.

## 2. 하자담보 책임기간 산정 부적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도급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의 준공검사를 마친 때에는 그 대가의 최종 지출시까지 하자보수보증금납부서와 함께 영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합니다.

공사의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8조 별표 1에서 정하고 있으며, 방수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3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천교통공사에서는 ‘대합실내 화장실 환경개선공사 중 건축공사’ 및 ‘터미널동 화장실 리모델링공사’에서 화장실 바닥의 방수공사가 포함되어 방수공사에 대하여는 보증기간을 3년으로 하는 하자보수보증서를 받아야 하나 동 공사 전체에 대해 하자보증기간을 2년으로 하는 하자보수보증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보완 조치 없이 처리한 사실이 있습니다.

[일련번호 : ]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제 목] 미반납 정기주차카드 보증금 수입 처리 지연

[위법부당내용]

○ 인천교통공사에서는 「부설주차장 운영규정」 제7조와 「부설주차장운영내규」 제8조 및 제9조에 의하여 임대시설 점주차량 1대 등에 정기주차카드(RF카드)를 발급받아 입출케 하고 주차요금을 면제하여 주고 있습니다.

○ 「부설주차장운영내규」 제7조에 따르면 월 정기주차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정기주차발급 신청서에 의거 신청하여야 하며, 정기주차카드 보증금 4만원을 납부하여야 하고, 정기주차 사용자 중 주차장 사용을 중단하고자 하는 자는 정기주차 이용해지신청을 하고 주차권을 반납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보증금 환불은 해지 신청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행하여야 하되, 정기주차권 관리자는 정기주차 이용해지자 중 15일 이내에 주차권을 반납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는 1회 이상에 한하여 주차권을 반납하도록 독촉하여야 하고, 독촉 후 15일이 경과한 미반납자의 주차권 보증금은 공사 수입으로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인천교통공사에서는 임대시설의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입점주의 정기주차 이용을 해지하고 정기주차카드를 반납 받아야 함에도 임대기간이 만료된 3개 업체 입점주에게 정기주차카드를 반납 받지 못하고 있으며, 정기주차권 관리자는 1회 이상 반납을 독촉하고 독촉 후 15일 이내에 정기주차카드 보증금을 공사 수입으로 처리하여야 하나 감사일 현재까지 미반납 정기주차카드에 대한 보증금 계 120천원의 수입 처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하고 있습니다.

[일련번호 : ]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제 목] 시설물 대여 사용료 부과 및 납부에 관한 사항

[위법부당내용]

○ 인천교통공사 교통연수원에서는 운수종사자교육의 운영에 지장이 없고, 공익에 위배되지 아니 하다고 판단될 경우 운수종사자, 운수관련 단체·조합, 유관기관, 자생단체,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및 사업장을 둔 사업자 등에게 연수원 시설을 대여하고 있습니다.

### 1. 사용료 납부기한 지연 방치

○ 「교통연수원 시설물 대여규정」 제10조에 따르면 사용료는 사용허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고, 다만 사용허가일로부터 사용예정일이 15일 이내의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2일전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같은 규정 제9조제1호에 따르면 사용허가를 받은 자일지라도 정당한 사유없이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 한 때에는 사용전 또는 사용 중이라도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으며, 또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납부기한 등을 연장하는 경우 사장은 이를 심사하여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교통연수원에서는 사용허가일로부터 15일 이내 또는 사용예정일 2일전(사용예정일이 15일 이내의 경우)까지는 사용자의 사용료 납부여부를 확인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 한 경우 시설 사용을 취소하거나 중지시켜야 함에도, 2007.11.14일자로 “시설물 대여 사업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일부 사용자의 사용료 납부기한을 규정과는 다르게 시설 사용 후 15일에서 최대 30일까지로 조정, 적용함으로써 13개 기관 총 239회의 사용료 계 69,746,000원을 시설물 사용 후 1일에서 최대 66일까지 지연 납부토록 방치하였습니다.

### 2. 변경 허가에 대한 사용료 산정·부과 부적정

○ 「교통연수원 시설물 대여규정」 제8조에 따르면 시설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변경 허가를 받아

야 하고 이 때에는 당초 납부한 사용료의 5%를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용변경신청서상에 변경내용으로 사용일, 사용시간, 사용장소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교통연수원에서는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사유로 사용일만을 변경 허가사항으로 간주하여 시간, 장소에 대한 변경이 있었음에도 사용자의 사용변경신청서 제출 등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고, 시간, 장소는 변경 허가사항으로 미간주하여 2008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10개 기관에서 13회에 걸쳐 시간, 장소를 변경하였음에도 계 174,400원의 추가분을 부과하지 않은 채 시설물을 대여한 사실이 있습니다.

[일련번호 : ]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제 목] 전자결재시스템 미구축 및 문서관리 소홀

[위법부당내용]

○ 「사무관리규정」(대통령령 제21698호) 제11조(문서의 전자적 처리) 행정기관의 장은 문서의 기안·검토·협조·결재·등록·시행·분류·편철·보관·보존·이관·접수·배부·공람·검색·활용 등 문서의 처리절차가 전자문서시스템 또는 업무관리시스템상에서 전자적으로 처리되도록 하여야 하며, 제24조(문서의 등록)문서는 생산한 즉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물등록대장에 등록하고 생산등록 번호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으며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공식적으로 결재 또는 접수한 기록물을 포함하여 결재과정에서 발생한 수정내용 및 이력 정보, 업무수행과정의 보고사항, 검토사항 등을 기록물로 남겨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기록물을 생산 또는 접수한 때에는 그 기관의 전자기록생산시스템으로 생산 또는 접수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그 기록물에 표기하여야 하며,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등록정보를 전자적으로 생산·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인천교통공사 「사무관리규정」 제22조에서는 ‘문서팀은 별지 제6호 서식의 문서접수 대장을, 처리팀은 별지 제2호소식의 문서등록대장과 별지 제7호서식의 문서접수 대장을 각각 비치하여 문서의 접수와 발송 사항을 기록·유지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인천교통공사에서는 2007년도 시 감사시 지적된 모든 문서는 등록하여 관리하시고, 문서심사책임자는 인천교통공사 사무관리규정 제2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업무를 철저히 이행하고 「전자정부법」 제4조 및 제16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전자문서시스템을 도입·시행하도록 하였음에도 2007년도에 도입계획 수립후 현재까지 전자결재시스템을 도입하지 않고 수기로 결재를 받고 있으며 2009년에 도입계획을 다시 수립하였으나 아직까지 도입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또한 일부분서에서는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를 누락하거나, 시행일자, 문서번호를 등록하지 않는 등 사무관리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문서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위와 같이 인천교통공사에서는 전자결재시스템을 도입하여 문서관리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전회에 감사지적을 하였음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시스템도입을 하지 않았고 수기결재를 시행함으로써, 일부 문서의 경우 최종결재권자의 결재를 득하지 않고 문서관리하는 사례가 있으며 문서등록 또한 문서 시행일자, 문서번호 미등록 하는 등 기록물관리를 소홀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련번호 : ]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제 목]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위법부당내용]

○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제23조(장부 및 서식의 전산처리) ①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 및 서식의 작성은 지방자치단체의장이 지정하는 전산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관련 자료를 전자계산조직에 입력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②영 제 35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 관계 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를 입력할 경우 그 자료를 출력보관 하여야 하며, 자료가 입력된 디스켓 또는 자기테이프 등의 전산보조기억매체는 해당 장부 및 서식의 보존기한까지 이를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 「인천교통공사 정보시스템관리규정」 제5조(기본방향) 정보시스템 소관 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1. 정보 기술아키텍처 도입계획 수립, 2. 정보화 추진계획 수립, 3.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보완 등)와 같은 기본활동을 수행하여야 하고 제6조(정보화 추진계획 수립) ①정보시스템 소관부서장은 제5조의 기본 방향에 의거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계획 및 정보화 추진계획의 수립이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정보시스템 소관부서 및 이용부서의 장은 제5조의 기본방향에 의거 정보화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그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 [1. 정보화 전략 기본계획에 대하여]

○ 그러나, 인천교통공사에서는 교통공사 출범이후 중장기 정보화 전략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그 결과에 따라 매년 전산화 대상 업무를 선정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에도 정보전략계획(ISP)등 정보화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지 않고 2008년 3월31일 정보관리시스템 운영방안 계획을 수립한바 있으며 2009년 10월 16일 “2010년도 인천교통공사 정보화 추진계획”을 수립하였다.

○ 이는, 인천교통공사 정보시스템 관리 규정 제5조 및 제6조에 의거, 정보화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에도 인천교통공사 설립이후 정보전략계획(ISP)등 정보화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 [2.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에 대하여]

○ 인천교통공사에서는 종합정보시스템을 1997년 외부용역개발 시행이후 내부 정보화 인력이 유지보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연도별 고객관리시스템, 혁신제안관리시스템, 사내인트라넷 시스템, 인터넷 홈페이지 개발, 성과관리시스템, 장애인콜택시 시스템 등을 자체개발하여 유지보수하고 있으며,

○ 또한, 종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신규 업무 개발, 시설이용 예약 등의 다양한 업무처리와 정보화의 체계적인 운영과 지원을 위해 전산 인력이 필수적임에도 전산팀 3명이 종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H/W유지관리, 신규 S/W개발, 보안업무, 홈페이지 관리를 하고 있으며,

○ 각 단위 시스템별로 필요에 의거 C/S 버전인 Centura, C#.net을 이용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경영정보 흐름을 파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각 단위시스템별 연계성이 없고 인사급여 관리 시스템과 이와 연관되는 시간외근무, 주말근무를 하여 지문인식시스템에 등록하였을 경우 급여관리시스템과 연동되어 자동 연계되도록 연계모듈을 개발하여야 하나 수기로 작업하여 다시 등록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 현재운영중인 종합정보시스템중 경영정보의 예금구분별 금융기관별 예금구좌별 잔액조회 메뉴는 SQL Error가 있으며, 수입금 현황조회 메뉴의 경우 데이터 입력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성과관리(BSC)지표자료 자동산출 프로그램 메뉴는 입력을 부실하게 운영하고 있다.

○ 위와 같이 인천교통공사 설립이후 정보화에 대한 종합 마스터플랜 없이 부분적인 정보화 시스템을 도입하고 정보화를 추진함으로써 효율적인 정보화사업이 추진되지 못하였고 현재는 WEB이 아닌 C/S버전으로 자체개발함으로써 세입에서 결산까지 경영정보를 볼 수 있는 통합시스템 구축이 이루어 지지 않는 등 지식경영을 위한 자원의 통합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있다.

[일련번호 : ]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제 목] 홈페이지 게시판 관리소홀

[위법부당내용]

○ 행정기관 홈페이지운영 표준지침에 따르면, 조직 전체의 홈페이지 운영 부서와 담당자를 지정함은 물론 콘텐츠별로도 소관 실·과 및 담당자를 지정·운영 하도록 하고 있으며, 「전자정부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전자정부 웹 표준 준수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08-10호, 2008. 4. 29)을 만들어 홈페이지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있고, 인천교통공사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내규」에 의거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고 2009년에 위 현황과 같이 홈페이지를 개편하여 운영하고 있다.

○ 인천교통공사 고객서비스 현장에 의하면, 인터넷 민원고객의 편의와 유사 중복민원의 감소를 위하여 홈페이지 고객광장 『자주하는 질문』을 운영하고 민원별 처리기간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처리기간을 살펴보면 인터넷 질의 5일, 친절/불친절 이용안내 1일의 처리기한을 두고 운영하고 있다.

○ 인천교통공사 홈페이지 게시판 관리현황을 살펴보면, 대부분 자유게시판 형태로 운영하고 있고 묻고답하기, 친절/불친절 이용안내, 고객제안의 게시판은 홍보팀에서 총괄관리하고 있으며 해당부서의 답변을 요하는 사항은 전화 등 우선으로 통보하여 답변을 하도록 운영 하고 있으며,

○ 묻고 답하기 게시판의 처리결과를 살펴보면 2007.11.1~ 감사일 현재까지 1,793건의 상담민원이 있었고 그중 28건을 답변 없이 운영하고 있으며, 친절/불친절 신고 게시판은 268건의 신고 중 34건을 답변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고객제안 게시판의 경우 87건의 제안 중 7건을 답변 없이 운영한 사실이 있다.

○ 민원상담 게시판은 인천교통공사 「민원사무처리규정」에 민원처리 기간

을 정하고 철저히 운영하여야 함에도 인천교통공사 고객센터 현장에 민원별 처리기간을 정하고 있으며 고객제안의 경우 처리기간이 없고 답변 처리도 하지 않는 등 미비하게 운영하고 있다.

○ 이와 같이 인천교통공사의 민원사무처리규정에 민원처리 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고 고객센터현장에 일부 민원별 처리기간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고객제안 메뉴에 대한 운영 규정이 없으며 묻고답하기 게시판의 경우 5일 이내에 답변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28건에 대하여는 상당기간(5일이상 ~2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답변을 하지 않고 있으며, 친절/불친절신고의 경우 1일 이내에 답변을 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34건에 대하여 답변을 하지 않았으며, 고객제안 메뉴는 7건등에 대하여 답변을 하는 않는 등 홈페이지 민원 게시판에 대해 부실하게 운영하고 있다.

[일련번호 : ]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제 목] 공유재산 취득 및 매각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 인천교통공사 「재산관리규정」 제18조(가격결정)제1항에 의하면, “재산을 매각, 매수, 교환 또는 대부할 경우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 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와 제2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공인감정기관의 감정가격조서, 인근 유사물건에 대하여 매매실례, 기타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교통공사에서는 모노레일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철도부지를 매입하면서 재산심의회를 개최하여 심의 결과에 따라 매입하여야 하며, 재산심의회시에는 공인감정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감정평가서에 의거 재산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 심의를 하여야 함에도, 재산가격 평정조서 없이 심의를 개최한 사실이 있으며,

또한 인천터미널 대합실에 있는 초대형 수족관 2개를 매각하면서 재산심의회를 개최하지 않고 매각한 사실이 있습니다.